

국제통화기금(IMF) 재정모니터(Fiscal Monitor) 주요 내용('26.4월호)

- 국제통화기금(IMF)은 세계 각국 정부재정을 비교분석, 전망하여 1년에 2회(4월, 10월) 「재정모니터(Fiscal Monitor)」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 '26.4.15일(수) 공개된 재정모니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[재정모니터 주요 내용]

- (재정현황·전망) 중동전쟁 파급효과와 차입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정부 재정상태가 구조적(structural)으로 악화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.
 -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'29년에는 100%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으며, 이는 1년 전('25.4월) 전망이었던 '29년 98.9% 대비 높아진 수치입니다.
 - * 전 세계 일반정부 부채비율(GDP대비 %): ('25) 93.9 ('26) 95.3 ('27) 97.3 ('28) 98.8 ('29) 100.1
- (위험요인) 향후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주요 위험요인으로, ①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출압박, ②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배분, ③국채시장 구조 변화*, ④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**, ⑤인구구조변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.
 - * 최근 일부 국가에서 단기국채 중심으로 발행하면서 만기가 빠르게 돌아오고 높아진 금리가 빠르게 반영되는 점 지적
 - ** AI 생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, 투자가 감소하면서 금융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차입비용이 증가
- (정책 권고) IMF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해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(well-targeted), 정해진 범위 내에서(narrowly focused) 한시적으로(temporary) 지원할 것을 제언하는 한편,

- ①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**명확하고 단계적인 중기적 틀**(medium-term frameworks)을 설정하고, ②효과가 불분명한 **재정지출을 합리화**(rationalizing current spending)하면서 **성장을 촉진하는 공공투자여력**(growth-enhancing public investment)을 **확보**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.
- 이러한 과정에서 **재정계획**(fiscal plans)에 대한 **투명한 평가**(transparent assessments)와 그 **결과를 공개함**으로써 **지속가능한 재정개혁**(durable reform)에 대한 **사회적 합의**(social consensus)를 **형성**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
[IMF 정책 권고와 관련된 우리나라 정책]

- 우리 정부도 중동전쟁 및 고유가·고물가 영향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고자 IMF 제언의 취지와 같이 **취약계층·피해업종**을 중심으로 **고유가 피해지원금, 에너지바우처**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**관행적 지출과 의무·경직성 지출**을 상시적으로 혁신하고, 이렇게 확보한 **재원은 재정-성장 선순환**을 구축하기 위한 **AI 대전환** 등 **미래 성장산업**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**재정운용의 투명성·책임성 강화**를 통한 **국민주권 재정**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**열린재정**(www.openfiscaldata.go.kr)을 운영하고 있으며, 최근에는('26.2월) **사업설명자료의 공개내용·시기를 확대***하였습니다.
- * [내용] (기존)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 등 → (변경) 하위항목인 '내역사업'의 예산규모, 사업효과, 각종평가 등
[시기] (기존)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(1월말) → 예산안 국회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(10월초)
-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의 **성장잠재력을 높이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**할 수 있도록 **재정정책 설계 및 운영의 고도화**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.

[재정모니터 내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전망]

□ (전망결과)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(D2) 비율을 '30년 61.7%, '31년 63.1% 수준으로 전망하였습니다.

* 국가채무(D1) : 현금주의 / 중앙정부 + 지방정부 채무
 일반정부 부채(D2) : 발생주의 / 중앙정부 + 지방정부 + 비영리공공기관 부채

○ 이는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직전 IMF 전망치와 비교시 '26~'30년에서 $\Delta 2.3 \sim \Delta 2.6\%p$ 개선된 수치로, 성과중심·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*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* 한국 명목성장률 전망('25.10월호→'26.4월호, IMF WEO, %): ('25) 2.1→**4.2** ('26) 2.1→**4.7**

IMF Fiscal Monitor 한국 일반정부 부채(D2) 전망 비교 (단위: GDP대비 %, %p)

	'26년	'27년	'28년	'29년	'30년	'31년
'25.10월(A)	56.7	58.9	60.9	62.7	64.3	-
'26.4월(B)	54.4	56.6	58.5	60.1	61.7	63.1
(B-A, %p)	$\Delta 2.3$	$\Delta 2.3$	$\Delta 2.4$	$\Delta 2.6$	$\Delta 2.6$	-

담당 부서	재정혁신정책관 지속가능재정과	책임자	과 장	오현경 (044-214-1830)
		담당자	사무관	전찬익 (jky820@korea.kr)
	재정혁신정책관 재정기획분석과	담당자	사무관	소재찬 (altria@korea.kr)
		책임자	과 장	이준우 (044-214-1850)
		담당자	사무관	정재우 (zeus7009@korea.kr)